

이재명 대표 기소...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검찰 수사 시작 1년 6개월만에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 손해" 천하동인 지분 의혹 등 수사 계속 李 "법정서 진실 가르기에 최선을"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검찰은 이 대표가 최종책임자로서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날 기소를 '1차'로 표현, 천하동인 지분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의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반면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

고 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하고 지난 달 16일 같은 혐의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5503억 원의 공익 환수 성과를 거뒀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저에 대한 기소는 '담정기소'(담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담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무도하고 부당한 야당 대표 죽이기 기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는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 내놓지 못했다"면서 "검찰의 기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됐다.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에 대해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도저히 부정부패의 종탑 판"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 대표의 겹겹이 방탄 갑옷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개특위 '300석 유지' 선거제 개편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린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발명부식 대선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를 수정한 안을 의결한 것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당직 개편, 광주·전남 의원들 주요 당직 진입하나

송갑석 지명직 최고 제의 받아 대변인단 지역의원 발탁 유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적쇄신 방안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명(비 이재명) 계로 분류되는 광주 재선인 송갑석 의원(서구 갑)의 발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 대변인단 등도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사무총장 교체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전체적인 인적쇄신 그림은 아직 유동적이다.

2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송갑석 의원에게 지명직 최고위원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이 광주를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합리적 성품의 비명계라는 점에서 인적쇄신의 상징성을 배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의 임선숙 지명직 최

고위원과 송 의원을 교체하는 그림이다. 이에 송 의원은 즉각적인 답변보다는 민주당의 결집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과 비명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통합형 인적쇄신이 최고위원직 수락의 조건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인적쇄신의 핵심인 사무총장의 거취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점이 변수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사무총장이 당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교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아 이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인적쇄신의 핵심은 사무총장 교체라는 입장이다. 지명직 최고 및 정책위의장 정도의 교체로는 비명계의 공감 등 당의 결집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비명계 핵심 인사는 "공감할 수 있는 인적쇄신의 그림이 그려져야 송 의원에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내 일각에서는 친명계이지만 정치적 친화력을 바탕으로 비명계의 신뢰를 받고 있는 김영진 의원의 사무총장 발탁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변인단에 광주·전남지역 초선 의원이 발탁되지 않는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장구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변인을 지낸 적이 있는 조오섭 의원(북갑)의 재발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파격 인적쇄신 카드도 조오섭 의원의 전략기획위원장 기용 설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 '당헌 80조'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적쇄신의 유동성도 커지고 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하되,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의 결의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헌정회 신임 회장 정대철 전 의원... "초정파적 원로 역할"

대한민국 헌정회는 21일 정기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정대철 전 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총회를 겸해 열린 헌정회장 경선에서 정 회장은 김일윤·김동주·장경우 전 의원과 경쟁해 52.99%(348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정 회장은 서울 중구에서 9·10·13·14·16대 의원을 역임한 5선 의원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때

표와 KBO(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을 지냈다. 헌정회장을 경선으로 선출한 이래 민주당 계열 인사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헌정회는 초(超)정파적 국가 원로 단체의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과 상시 대화 채널을 만들고 국가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선진정치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연합뉴스

국힘 주호영·성일종, 민주 박홍근·우원식 광주 명예시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 여야 의원 4명이 광주 명예시민이 됐다. 강 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각 의원들에게 명예 시민증을 전달하고 광주지역 발전과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이들은 올해 정

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AI 영재고 설립, 국립 광주정수년치료재활센터 건립 등 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해준 공로가 인정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 출신이 아닌 내·외국인, 주요 기관장 중 시장 발전에 기여한 122명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 /최권일 기자 cki@

2022년도 중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2023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동영상 메뉴얼

☑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누리집(홈페이지)을 참조하세요.(www.budamgum.or.kr)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콜센터
032-590-5093

폐기물부담금제도

동영상 메뉴얼

생산지책임재활용 제도(EPR)

제도 교육자료

환경성보장제도

제도 안내 동영상

← 자원 순환 제도 →